

POLITIC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김문수-한덕수 담판 주목...국민의힘 내홍은 여전

대선 투표용지 25일부터 인쇄
선관위, 24일 변동까지 기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 사항이 표기된다. 이날 29~30일 처리되는 사전 투표 투표용지에는 이날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날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날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이다.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달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복귀 희망 사직 전공의
이달 중 추가모집 검토”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행복센터 자원 순환 챌린지
광주시, 우수 센터 20곳 선정

시민이 스스로 매주 금요일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골목길, 상가 주변 등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활동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주민과 함께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3년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러스’ 사업으로 시작한 지난해까지 총 31개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했다. 그 결과 주민 자치·복지 업무에 집중돼 있던 행정복지센터 관심도를 청소·자원순환 분야로 확산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명을 이해하기 쉽고, 자원순환 전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로 바꿨다.

더 많은 행정복지센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규모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연말 우수 성과를 거둔 센터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시기·방식 등 논의...불발 땀 ‘11일 전 단일화’ 불투명한 “단일화 없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않겠다” 배수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7일 저녁 ‘담판’에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을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11일)로 잡고, 이날 김·한 후보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판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빅텐트’의 항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담을 시작했다. 두 후보는 약속하며 사전 촬영을 한 뒤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한 후보는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김 후보는 국회의

원,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한 후보가 “(제가) 정치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 주로 언론들을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기자들하고 만났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 단일화에 대한 각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단일화 방법과 시기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가 이날 담판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한 실무 논의를 거쳐 8~10일 중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후보 등록 마감 직전 단일화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며, 방법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11일보다 늦어져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5일 전까지만 성사되면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현재 여론조사상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에서 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김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인 만큼 시기를 늦출수록 역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향후 선거운동이나 협상 과정에서도 무소속 후보로 뛰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단

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며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김·한 후보가 어렵사리 마주 앉더라도 평행선만 달리다가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향해 정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한 ‘조속한 단일화’를 이행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날 ‘11일 단일화 타임라인’ 도출에 실패하면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에 대비해 지도부는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과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한 후보의 담판을 지켜본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조속한 단일화에 응하도록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김 후보에게도 의총에 참석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후보 비서실장(김재원 전 의원)은 의총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캠프를 찾은 원내지도부에 “후보가 여러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빼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각에선 양측이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 B’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헌상 특례규정(74조 2)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직 의원 210명은 김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다. 당에서 김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이 고조되는 데 대한 ‘맞불’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양부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원천차단 법안 발의
“국가정보원법 취지 안맞는 불발...국내 정치 개입 빌미 차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를,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자체 판단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사찰하거나, 시민단체의 대표를 사찰대상으로 하여 사생활을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등 끊임없는 국내 정치 개입 시도의 의혹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소용돌이 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율아매는 행위로 국가정보원 설립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 판단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문수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
최근 10년 대학생수 수도권 비중 4.74%p 증가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 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 새 3.98%p(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p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에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p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p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p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도가 3.65%p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 동안 추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줄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든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감소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공약 건의과제 반영 온힘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만나
미래발전과제 설명·채택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만나 전남지역 핵심과제를 반영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 현안이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10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정당 공약에 채택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건의한 여러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김영록 도지사가 7일 서울 국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남 미래발전 10대 핵심과제’ 등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모아 발굴한 대선공약이 정당 공식 공약에 채택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져 전남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전남이 제안한 과제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전략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자 선대위를 지속해서 찾아가 공약과제를 건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국 최초 전남 정원 관광코스 ‘남도정원 산책’ 선보여

국립정원문화원과 1년여 담사
남도 멋·풍류 19개 상품 선정
전남 관광플랫폼서 정보 제공

전남도가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남도의 멋과 풍류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여행하는 ‘남도정원 산책’ 코스를 선보인다.

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남도 정원에 대한 관심과 명성으로 정원관광 시대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

남도정원 산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에선 지방정원, 민간정원, 전통정원 등 도내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원투어 코스를 안내한다.

여행하고 싶은 테마별 정원코스를 선택하면 정원의 특징과 주변 정원들과 연계해 여행할 코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코스는 전남도와 정원관 ‘국립정원문화원’이 1년여간 담사 등

준비를 통해 선정됐다.

총 19개 코스로 △전통정원, 캠프 등 ‘테마코스’ 5개 △담양, 구례, 해남 등 정원이 집중된 시군별 ‘지역코스’ 13개 △남도의 주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는 4박 5일 ‘장기코스’ 1개다.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남도의 전통정원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 가드너 양성을 위해 ‘남도정원, 숨과 풍경을 잇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위주 정원투어를 추진한다.

국내외 체인망을 갖고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월간 가드닝에선 담양권 1박 2일, 해남권 1박 2일, 고흥권 1박 2일 등 남도정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8일부터 월간 가드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는 국가정원 1개소, 지방정원 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전통정원 3개소가 있으며, 국립정원문화원과 더불어 정원의 본고장으로 정원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순천 화기의 정원 산책



해남 비원



구례 반야원